현대차 노조 "올해 임단협서 '정년 연장' 반드시 실현"

노조 간부 67% "정년연장, 가장 시급한 과제"
노조측, 파업 불사해서라도 정년연장 실현
올해는 임단협서 가장 큰 이슈 될 듯
지난해 국내공장 신설 등으로 아젠다서 빠져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조합원들 지지를 바탕으로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정년 연장'을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노조 측에선 파업을 해서라도 올해는 실질적인 정년 연장을 끌어내겠다는 분위기다. 지난해까지 4년 무분규로 타결됐던 현대차 노사 임단협은 올해는 '정년 연장'이라는 변수 때문에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말 '2023년 단체교섭 준비' 차원에서 400여명의 확대 간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노조 측은 매년 확대 간부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측과의 단체교섭 주제들을 정리하고 있다.

이에 노조 측은 올해 임단협의 최고 아젠다로 '성과에 비례하는 보상'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대차는 지난해에 이어 올 1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릴 전망이다.

노조가 주장하는 '성과에 비례하는 보상' 세부 안건에는 ▲기본급 인상 ▲순이익에 맞는 성과급 ▲해고자 복직 ▲상여금 800% 인상 ▲신규 인력 추가 충원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노조가 임단협에서 가장 공을 들일 안건은 다름 아닌 '정년 연장'이라는 진단이다.

특히 올해 '정년 연장' 안건은 나이를 불문하고 노조원들 전체에 중요 관심사로 뜨고 있다.

실제 노조 확대 간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올해 단체교섭에서 가장 시급하게 제도 개선해야 할 의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6.9%가 '정년 연장'을 꼽았다. 이어 확대 간부들 39.8%는 '복지 확대'를, 34.9%는 '노동시간 축소 및 식사시간 확대'를 복수로 선택했다.

노조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반드시 '실질적인 정년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측과 합의한 '부분적 정년 연장'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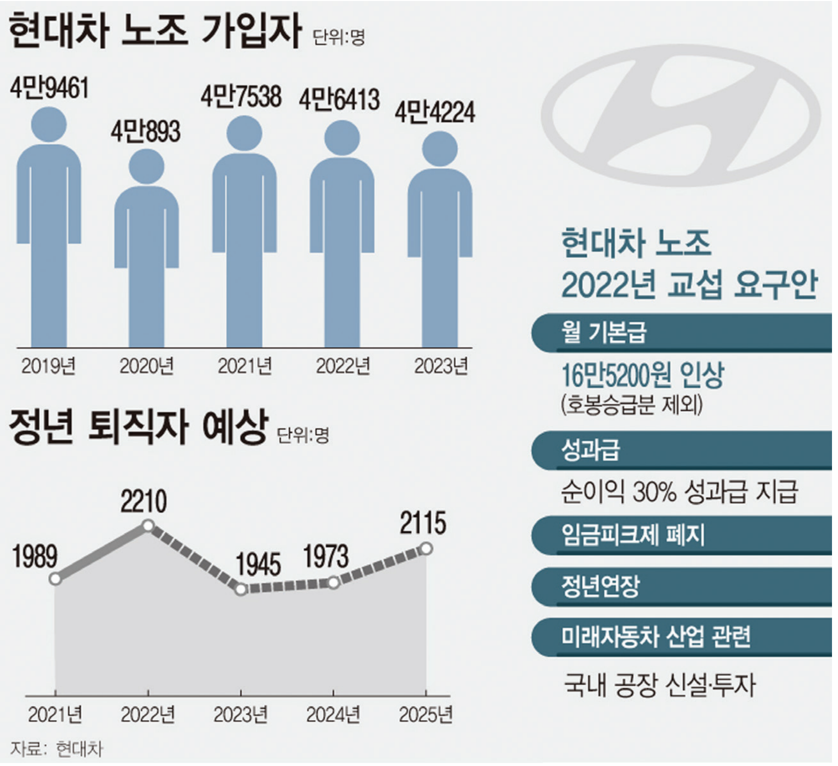
현대차 노사는 앞서 2021년 '부분적 정년 연장'의 일환으로 '숙련 노동자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바 있다. 이는 숙련된 근로자 중 희망자에 한해 직군별로 재고용(1년)에 나서는 제도다.

그러나 이 같은 부분적 정년 연장에 대해 노조 내부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고용 기간이 단 1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 확대 간부 설문조사에서 52.2%는 정년 연장에 대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와 연동해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1년 연장 차원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지급되는 65세 직전까지는 정년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노조 확대 간부들 중 "현재 재고용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단 7.4%에 그쳤다. 그만큼 정년 연장을 원하는 노조 간부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다.

현재 현대차 정년은 60세로 국민연금 수령 연령(65세)과는 5년이라는 시차가 있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올해 단체교섭 안건으로 정한 정년 연장은 수년 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단순히 현대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과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완성차 업계에선 정년 연장은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사측이 이를 수용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대차가 정년을 1년 연장하는데도 추가 비용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차 사측은 지난해 임단협에서 29년 만의 '국내 공장 신설'과 '생산직 신규 채용'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며 노조 측과 협상에서 '정년 연장'을 뺐다. 하지만 올해는 노조가 강력하게 65세 '정년 연장'을 주장할 방침으로 이 안건이 임단협의 최대 이슈가 될 조짐이다.



현대차 노조, '정년 연장' 강력 주장하는 이유 보니…

노조 줄기차게 요구, 사측 '절대 수용 불가'
3년내 생산직 1만명 퇴직, 노조 사세에 영향

"올해 정년 연장 안건은 무조건 (임단협에) 올라갑니다. 무조건입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정년 연장 안건을 반드시 실현한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 직전 해인 64세까지 회사에 재직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기존 만 60세인 정년을 '만 65세'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노조는 직원들의 생계보장과 품질제고 등을 정년 연장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 이면에는 정년을 연장해 노조 조직력도 강화하겠다는 복잡한 셈법도 들어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이 현대차 임단협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것 자체가 올해 임단협의 최대 변수라고 지적한다. 현대차에서는 특히 최근 4년 동안 단 한번의 분규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정년 연장'이 핫이슈로 떠오르며 무분규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조심스럽게 나온다.

의 66.9%가 '정년 연장'을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 설문조사에서 정년 연장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52.2%로 절반을 넘는 찬성표를 받았다.

◆현대차 노조 "정년 연장, 올해는 반드시 관철" 강한 의지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내달 24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2023년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한다. 이 요구안은 곧바로 현대차 사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올해 요구안 중 최대 핵심은 기본급 인상 같은 단발성 안건보다 단연 '정년 연장'이 될 전망이다. 현대차의 정년 연장은 산업계 전반의 초미의 관심사로 사회적 아젠다로 떠오를 수 있다.

노조는 이미 2017년 모든 기업의 정년이 만 60세로 의무화하자 사측에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자고 요구해왔다. 지난해 임단협 협상에서도 정년 연장을 재차 요구했지만 사측 거부로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하지만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선 정년 연장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벼르고 있다. 최근 노조가 확대 간부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사측 "전기차 시대 대비해야" vs 노측 "고용연장 최우선"

노조가 노조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정년 연장을 재차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는 노조원 구성과도 관련이 있다. 현재 현대차 노조원은 4만4224명으로 이 중 2026년까지 정년 퇴직을 하는 조합원은 1만2600여명으로 추산된다. 정년 퇴직으로 조합원이 줄면 노조의 조직력 유지에도 어려움을 생길 수 있다.

현대차 노조 가입자는 2019년 4만9461명으로 전체 직원의 70.7%를 차지했지만 매년 감소세다. 이 같은 조합원 감소는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업계에선 현대차에서 매년 2000명 이상 정년 퇴직자가 발생하는 만큼 노조 가입자는 향후 3만명대로 축소될 것으로 본다. 정년 연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현대차 노조의 세력은 그만큼 약해질 수 밖에 없다.

노조 집행부는 지난 7일 발행한 노조지에서 "4~5년내 정년퇴직을 하지 않는 조합원은 정년연장에 관심이 떨어지고, 나이 어린 조합원일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집행부는 정년연장 문제를 관철해야 한다는 의견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측은 정년 연장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요구대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막대한 임금 비용과 노동경직성으로 또 다른 고용 불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향후 미래차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연구개발(R&D)과 소프트웨어(SW)로 역량을 확대하는 만큼 생산직 중심의 정년 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정년 연장은 MZ세대 조합원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도 과제다. MZ세대 직원들은 정년 연장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 정년 연장이 단체교섭권을 독점한 기성 노조의 특혜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현대차에 근무하는 한 30대 조합원은 "이직이나 퇴직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반드시 우리들에게도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다"며 "더 중요한 것은 임금인상과 상여금이지 정년 연장은 일부의 주장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현대차 같은 고용이 안정적인 직장에서는 정년 연장이 결국 노조원 모두의 혜택이라는 인식도 강해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노조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뉴시스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최 정 현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앤프레스